

# 【 2017.1.20(금) 강원도민일보 】



2017 강원경제인대회 및 신년인사회가 19일 원주 호텔인터불고에서 기관 단체장과 경제단체 대표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참석자들이 강원경제 발전을 기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영

## 동계올림픽 성공개최·경제위기 극복 힘 모은다

### 2017 강원경제인대회

강원경제인들이 정유년 새해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강원도민일보와 강원도, 중소기업중앙회 강원본부는 19일 오전 호텔인터불고원주 컨벤션홀에서 맹성규 도경제부지사, 김동일 도의회 의장, 김기선 국

회의원, 원창목 원주시장, 각 경제단체 대표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7 강원경제인대회 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원경제인들은 1년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기원하며 본지가 펼치고 있는 '2018평화의 벽&통합의 문' 건립캠페인에 함께하기로 했다.

"증자독식 구조인 지금의 중앙집권적 정치 시스템으로는 강원경제가 2.4%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며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원경제인들이 지방분권 등 국가 대개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홍식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부회장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기술개발과 글로벌 시장 진출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맹성규 경제부지사는 "기업 지원정책, 전통시장 살리기, 사회

적경제 육성 등을 통한 강원경제 활성화에 혼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은복 > 관련기사 8면

尙志精神, 仁·義·禮·智·信  
인성교육 선도대학

**상지대학교 2017학년도 편입생 모집**  
2017.02.03.(금) ~ 2017.02.06.(일)

입학·편입학 상담 033-730-0125, 0127

**상지대학교**

격이 다른 신문 - 선전국형·최대 28면·최다 컬러·지역밀착

## 국내외 악재 속 경제위기 극복 공감대 마련

### 의미

도내 주요 경제 주체 총출동  
소비 진작·수출증대 정보 공유

강원도내 경제 주체들이 총출동, 글로벌 경제 위기 극복과 4차산업혁명 시대에 강원도만의 경쟁력을 갖춘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강원경제인대회 및 신년인사회'가 성황리에 끝났다.

19일 호텔인터불고원주에 열린 이번 행사에 참석한 경제인들은 국내외 악재에 따른 경제 위기에 공감하면서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지 머리를 맞댔다. 특히 올해 경제인대회는 1년 앞으로 다가온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 저성장에 빠진 강원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또 원주-강릉복선전철, 서울-양양 등 서고속도로 개통 등 강원도정사에 있어 교통인프라가 획기적으로 확충되는 만큼 기업유치 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강원경제인들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추락한 소비심리를 어떻게 끌어올릴지



19일 원주 호텔 인터불고에서 열린 강원경제인대회 및 신년인사회에서 참석자들이 김기선 국회의원의 건배제의로 건배하고 있다. 서영

와 부진에 빠진 수출 확대 방안에도 정보를 공유했다. 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경제정책 실종도 우려했다. 특히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제발전 여부에 정치 안정화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정치 발전이 경제 발전에 밑거름이 된다는 데 공감, 탄핵

정국의 시국안정과 함께 조기 대선에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후보자들의 인물 검증에도 열을 올리기도 했다. 김기선 국회의원은 "정치가 안정돼야 경제 발전이 이뤄진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도민들이 정치로 인해 걱정을 하지 않도록 정치안정에 노력하겠다"

고 약속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강원도만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정재훈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은 "4차 산업혁명을 맞아 강원도만의 차별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있다"며 "강원도가 미래에 활할 수 있는지 우선 순위를 정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은복

# 작년 강원지역 건설사 수주 '1.5조'... 2010년 이후 최대

지난해 강원도 건설사의 신규 수주실적이 2010년 이후 최대치를 나타냈다. 도내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군부대 시설공사가 집중된 영향으로 보인다.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회장 오인철)가 19일 집계한 지난해 도내 공공공사 수주 실적에 따르면 도내 건설사들은 지난해 1조4832억원의 공사를 수주했다. 전년도 수주액 1조2984억원보다 14%가량 증가했다. 지난 2010년 1조5459억원의 수주액을 기록한 이후 최대 규모다.

수주 건수도 2186건으로 전년도의 2152건보다 소폭이나마 증가했다.

평창동계올림픽 특수가 종료되면서 최근 도내 신규 수주 규모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난해 도내 건설수주액 증가는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 건협 강원도회 집계

군 관련 시설공사 증가 영향  
전년보다 14%가량 많아

올해도 지난해수준 발주 예상

업계 “공사비 등 제도 개선 필요”

평창동계올림픽 시설 공사가 본격적으로 발주된 2013년과 2014년의 도 건설업계의 수주액은 각각 1조4666억원과 1조4286억원이었다. 그러나 공사 발주가 마무리된 2015년에는 1조2000억원대로 떨어졌다. 도 건설업계는 지난해 수주 실적이 호조를

연도별 강원도 건설업체 공공건설 수주액 (단위:억원)



를 보인 것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군 관련 시설공사 발주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도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국방시설 분야에서 군 관련 공사 발주가 전년보다 증가했다”면서 “군 공사를 제외하고 특별히

공공발주가 늘어난 분야는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군 시설공사가 당분간 도내 건설업계 수주를 이끌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도 지난해 수준의 군 시설 공사 발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등

대형 인프라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지역 건설사들의 수주 여건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군 시설 공사의 특수성을 반영한 공사비 책정 등의 제도적 개선은 필요하다고 도내 업계는 주장한다.

군 시설의 경우 접경지역에서 추진된다면 특수성 때문에 인력의 현장 출입 등에 까다로운 문제가 있는데 공사비 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대형 토목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도 건설업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사안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도내 건설사가 영세하기 때문에 대형 토목사업을 단독으로 수주할 수는 없다”면서 “분할발주를 하고 지역업체의 참여 비율을 높이는 입찰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 강원도,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사업 피서철 이전 추진

해안경관을 해치는 동해안 군(軍) 경계철책 철거사업이 추진된다.

강원도 환동해본부는 동해안을 힐링과 웰빙이 있는 체험관광 허브로 구축하고자 관광지의 군 경계철책 철거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32곳 27km의 철거를 추진한다.

예산 103억원을 확보했다. 처음으로 국비 52억원도 확보했다.

그러나 해안경계 부대와 군 작전상 문제가 없는지 군부대와 협의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어 줄어들 가능성은 크다. 도와 시·군은 군과 협의를 거쳐 조속히 철거에

나서 피서철 이전에 철거할 방침이다.

경계철책을 철거한 곳에는 대체감시 장비와 시설이 설치된다.

해안에 설치된 경계철책은 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관광객 불편, 주민 경제활동 위축으로 지역주민의 민원이 많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있다. 주민들은 경계철책 철거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도와 시·군은 2015년부터 작년까지 88억원을 들여 26곳의 경계철책 15.4km를 철거했다. 경계철책이 사라진 곳은 휴양 및 휴게 쉼터로 활용할 예정이다.